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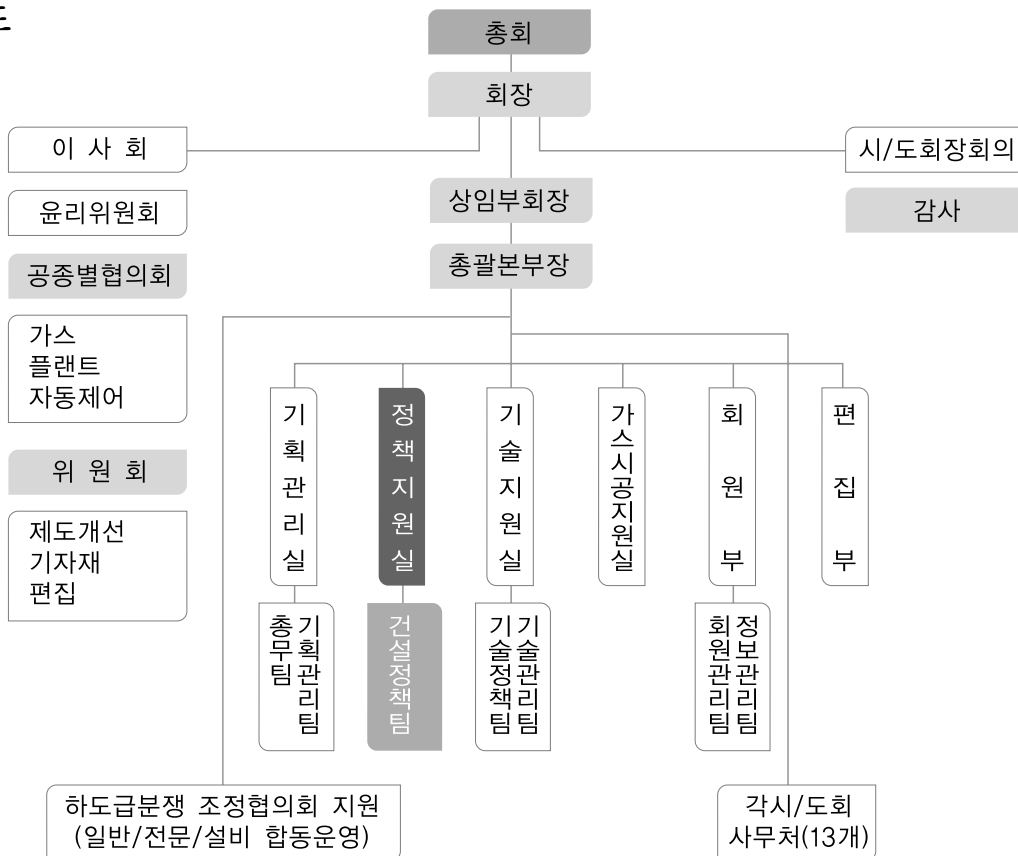
설비건설업계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책지원실

본지는 지난 2008년 5월호부터 2009년 10월호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시·도회 사무처를 소개함으로써 대한설비건설협회 시·도회의 사업추진 및 업무현황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국 13개 시·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도 지난해 12월호부터 소개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설비건설업계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지원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직도



□ 협회 정책지원실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정책지원실 하면 우리 회원사처럼 일반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한 부서 이름이겠지만 우리 회원사 또는 일반회사의 조직과 비교하면 전략사업부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원사 모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전체 업계를 대표하여 국가 시책과 정책에 입장을 대변하고 업무를 추진할 부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부서가 정책지원실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거창한 일만 수행하는 것이 정책지원실 업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담당하는 최 일선 실무부서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어려운 문제점 하나하나를 정책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것도 정책지원실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 정책지원실 중점 추진사업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기계설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는 다른 전문기술 분야로 설계도서 및 각종 시공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독립·전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산업에서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위상은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2008년 3월 제7대 강석대 회장님 출범과 더불어 설비건설발전을 위한 제1,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설비건설협회 회장단 및 시·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설비건설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설비기준관련법령의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여간 협회에서는 설비건설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설비건설관련 학계, 연구소, 업계 등으로 구성된 설비건설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고려대 산학협력연구소와 기계설비기준법 제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계설비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7월 13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및 유지관리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정희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1명의 여·야의원이 함께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과정 중에 있으며, 정책지원실은 향후 본 제정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직할시공제 추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1989년 협회 창립이후부터 줄기차게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동안 정책지원실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사업의 중심적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국가계약법(당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 토록 하였고,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권장과 관련된 각종 행정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SH공사 등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매년 4천억 정도의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에는 추정금액 450억원이 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기계설비공사 등 굵직굵직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지원실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더

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마련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마련의 하나로 지난 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직할시공제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할시공제는 기존의 3단계 건설 도급구조인 발주자 → 원도급자(종합건설업자) → 하도급자(전문건설업자)를 2단계 [발주자 → 시공자(전문건설업자)]로 축소하여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업계는 발주기관과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하도급 수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실은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각종 건설산업 제도개선 추진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업계에 특히 중요한 법령으로는 “건설업 등록제도와 도급계약, 시공관리,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및 입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상대적으로 계약에 있어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하도급법” 그 밖에 각종 노동관계법령 등이 있습니다. 정책지원실은 이와 같은 주요 건설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공청회 및 담당부처회의에 참석하여 업계이익을 대변하고, 회원사에게 보다 나은 경영환경 제공을 위해 대정부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운영

제7대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송기영 위원장을 필

두로 15개 간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실은 협회 차원에서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플랜트업계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플랜트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건설공사 호황에 따른 수주현황 등의 정보수집과 플랜트업계 해외공사수주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접촉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정책지원실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뿐만 아니라 업계의 사정과 시공 현장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협회 정책지원실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분야 엔지니어링 출신으로 조달청에서 공사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년간 공사 현장을 경험하고 협회 태동과 더불어 입사하여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현일 실장을 수장으로, 같은 기계분야 엔지니어링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플랜트현장의 공사감독과 기획업무 경력을 쌓고 협회에 입사하여 현재 건설산업 및 노동관계, 플랜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동호 차장, 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회원사 경영지원 등 법률 및 계약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뒤늦게 본회 정책지원실에 합류해 건설관계 법령 및 계약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 차장으로 정책지원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실은 다른 건설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3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업계 정책지원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